

“시대처럼 울 아침”을 기다리던 독립운동가의 복권

신 찬 군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전 세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

유신치하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던 리영희 선생은 6.25참전 예비역장교다. 그 공로로 화랑은성훈장까지 받았으니, 이른바 역전의 용사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민주화운동이나 군사정부가 조작한 필화사건으로 구속될 때마다 리 선생이 뒤집어쓴 혐의는 으레 반공법 위반이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다.

어느 날 기관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을 때였다. 진술조서의 상훈란에 곧이곧대로 훈장 이름을 적었더니 앞에 앉아 있던 젊은 수사관이 몹시 놀라더라고 자서전은 전한다. 아마도 수사관은 이른바 ‘반체제’ 인사인 리영희 선생이 구속되기까지는 나라를 위해 도무지 일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반국가적인 경력만을 지녔으리라고 지레짐작 했던 것 같다.

그 훈장에 대해서 리영희 선생은 평소에 상훈번호나 받은 날짜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육군본부에 문의해 확인해보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 훈장이 나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 효과도 없다는 사실은 민간인 생활에서 내가 여러 번 겪은 국가 권력의 조사과정에서도 분명했다”. 리영희 선생의 훈장에 대한 소감이다. 훈장이 애국정신을 입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훈장은 정부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표장이다. 건국 이래 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다. 당연히 받아야 할 애국지사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되어 버젓이 받기도 했고 정작 목숨을 내놓고 일제와 싸웠어도 그 노선에 따라 서훈이 보류되기도 했다.

우리 현대사는 과거 청산이 된 적이 없다. 최근 KBS가 일제치하에서 그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사지로 몰아놓은 대가로 훈장을 받았던 친일파의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기이하게도 당대의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도 해방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평평거리며 살았고 오늘날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을 하면 자손 대대로 온갖 호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현대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광복 60년.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가로 받들기는커녕 좌파계열이라는 이유로

우리 역사 속에서 외면되어 왔던 사회주의 계열인사에게 서훈이 내려졌다. 님 웨일스의 소설 '아리랑'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김산과 조선노동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 등 47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동안 이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남과 북의 다른 이념의 잣대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직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면서도 잊혀져야만 했던 이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복권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훈장을 받을만한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욕과 불의의 역사 속에서 무분별하게 주어진 서훈도 이번 기회에 치탈되어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한 최고위층이 국가 기틀을 공고히 했다는 이유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실이 국회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적이 있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시위군중을 살상하던 신군부세력은 이를 가리켜 '충정작전'이라 명했다. 원래 작전이란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행위일 때만 사용되는 군사용어인데 진압군은 시민 학살행위를 작전이라고 위장한 것이다. 국민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인사들이 광복 이후 안중근, 김구, 안창호, 조만식 선생 같은 당대의 애국지사들이 받았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어떤 공로를 들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에 달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나라에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현 등 5등급의 무공훈장이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무력진압에 나선 관련자 가운데 훈, 포장 및 표창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 무공훈장은 당시 출세가도를 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 때 총칼을 휘둘렀거나 지휘를 한 신군부 세력에게 주어진 훈장은 지금까지도 회수되거나 치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훈법에서는 "서훈공적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할 때는 서훈을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훈장은 박탈되어야 한다. 파란만장의 역사가 굵이췌던 우리 현대사에서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불의와 싸우다가 희생되고 영어의 몸이 되어 고난을 겪었던 인사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을 탄압했던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 역시 적지 않다.

우리 주위에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의 찌꺼기가 수없이 널려 있다. 어찌 훈장뿐이겠는가.

일제 치하에서 앞잡이가 되어 애국지사를 잡아 가두고 훈장을 받았던 친일파나 광복 후에도 여전히 고관대작이 되어 불의의 역사를 거침없이 만들었던 그 후손들은 지금도 건재하다. 수년 전 이완용 처벌문제가 국회에까지 갔으나 호지부지됐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소급입법에 얽매일 수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다. 법이 역사의 장애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일제 앞잡이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반성은커녕 더 큰 소리로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온 나라, 온 국민이 불법이고 군사반란이라고 규탄하는 군사반란 주동자들의 사법처리 역시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